

제 1 장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 문제

-원인 분석과 대책에 잠재된 문제점 지적-

서언

2008 년 2 월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해 4 월의 첫 방일을 앞두고 대일 무역역조 (적자) 축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일역조는 벌써 수십년전부터 양국간에서 논의되고 각종 대책이 강구되어 온 문제이지만, 부품이나 설비 등을 일본에서의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구조를 일조일석에 바꾸지 못해 오늘날까지 끌어온 장기적 과제다.

대일역조 문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현상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거에 한국측이 주장해 온 대일 무역역조에 관한 「전설」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한국에서의 언론 보도 등도 포함하여 자세에 검증하고, 한국측 주장이 실현되면 대일 무역역조가 정말 해소될 것인지, 그 정당성을 고찰했다.

그리고 본고는 한국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측의 대일 무역역조」 문제를 논하기 위해 일반적 용어인 「대일 무역적자」나 「대일 무역불균형」이 아니라, 한국측의 주장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국에서 쓰이는 「대일(무역)역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역조」란 「사물의 진척이 나쁜 방향으로 가는 상태」(한국어사전)을 말한다.

제 1 절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 문제와 대일정책

1. 이명박 정부의 대일정책

2008 년 2 월 이전의 노무현 전직 대통령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한일관계가 다소 소원해져 정상끼리의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일역조에 관한 화제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제기한 이 문제는 김대중 전직 대통령 시대 (1998 년부터 2003 년) 이전의 한국측의 주장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하기 전의 한국측의 사정에 대해 한국의 연합뉴스는 「대일역조가 확대, 대책을 강구해도 성과를 기대 못해」(2008 년 3 월 24 일자)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가 전하고 있는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으로는 대일역조의 근본 원인은 부품·소재분야에 있고, 적자 축소를 위해서는 일본 업체로부터의 기술이전 등 기술협력을 확대함과 아울러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측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1960 년대부터 계속 제기되면서도 효과를 올리지 못해 왔으며, 이번에도 실효성은 낮고, 대일역조 문제는 단기간내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일 양자간이 아니라 다자간에서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이였다.

이 기사는, 과거의 언론의 논조나 정부의 견해와는 달리 대일역조에 대한 기본적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대일적자액은 1997 년 말의 IMF 위기 직후의 131 억불에서 다음 1998 년에는 46 억불¹로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 계속 증가되고 2007 년에는 299 억불, 2008 년에는 328 억불까지 증가되었다. 그런데, 2008 년 9 월의 리먼쇼크 이후의 세계적 금융위기로 한국의 수출이 감소됨에 따라 일본에서의 수입도 감소되었기 때문에, 2009 년의 대일역조 금액은 277 억불로 전년 대비로 대폭 감소되었다.

2. 한국의 대일정책 리뷰

한국정부는 1970 년대부터, 「수입선 다변화품목제도」를 시행하여 일본에서의 수입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변화」란 다각화하려는 것으로 특정 국가에서의 수입에 편중되지 않도록 일본에서의 수입을 제한함과 동시에 수입선을 다각화하여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거나, 장래적으로 국산화할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다. 이 「다변화 정책」에 대하여 일본은 GATT(훗날의 WTO)에 위배한다고 해서 항의했지만, 한국이 1996 년에 OECD 에 가입할 때의 조건으로서 이 제도의 철폐가 의무화되고 1999 년 7 월에 드디어 철폐되었다.

1993 년 7 월 23 일, 한국 상공부는 김영삼 정부하에서의 「신경제 5 개년계획」에 근거한 대일역조 개선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대일 무역역조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전체 산업경쟁력의 향상 방안과 조화시키면서 세부적 종합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참을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한다. 정치적 논리와 감정에 치우친 과거의 대일관계를 청산하고, 경제논리에 입각하며, 양국간의 상호신뢰의 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무역의 확대 균형을 지향한다. 「일본시장에서의 성공은 세계시장을 제패하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마케팅 대책 등 종합적 대일시장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였다.

과거의 「무역적자의 책임은 일본측에 있다」고 하는 일본제품 수입억제 방안에서 벗어나, 무역적자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요인 탓이라고 하고 있다. 과거의 대일정책이 「정치적, 감정적」이였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금후에는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한 시책을 실행하겠다고 한 것은 획기적이였다. 또한, 대일역조의 원인이 일본시장의 폐쇄성에 있다고 비난을 했었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의 눈이 까다로운 일본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세계시장을 제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 이후, 한국이 경기침체나 수출 부진에 빠지면, 원인은 부품·소재를 일본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이 분야의 국산화 추진이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정책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의 실효가 나오기 전에 자연스럽게 경기가 회복하는 등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부품·소재 국산화 등 힘이 드는 일이 잊혀진다는 과정이 반복되어 온 것이다.

제 2 절 한국이 주장하는 대일역조 문제

1. 역조의 원인과 책임

과거 장년간에 걸쳐 한국측이 대일역조의 원인으로서는 되풀이 주장해 온 논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대일역조의 최대 원인은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따라서, 대일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여 현지생산을 할 필요가 있다.
- ③ 일본기업을 위해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등 대한투자 조건을 개선하겠으니 일본기업은 한국에 투자를 해주기 바란다.

이하에서 이들 주장이 근거가 있는 정당한 것인지를 검증한다.

2. 「대일역조의 최대 원인은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부품·소재」의 정의

한국정부가 언론이 대일역조의 최대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부품·소재」의 수입이다. 한국에는 2001 년에 제정된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부품·소재 산업에 관한 법률도 있고, 「부품·소재」가 자주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정의가 애매한 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발언이나 언론 보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면, 「부품·소재」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부품·소재의 상품명을 개별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고, 부품·소재의 상품 분류는 무역통계에 명기되어 있지만, 개별적 상품의 코드번호(HS CORD)는 공표되어 있지 않다.

지식경제부²의 홈페이지의 통계자료 중에 「부품·소재」란 항목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상품이 「부품」 및 「소재」로 분류되어 있다.

「소재」:섬유 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제 1 차 금속제품

「부품」:조립 금속제품, 일반 기계부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 부품, 전기기계 부품, 전자 부품, 정밀기기 부품, 수송기계 부품

한국무역협회의 홈페이지에는 한국 외에 일본, 미국, 중국, EU 에 있어서의 부품·소재의 수출입 실적이 게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수출입에 차지하는 부품·소재의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 표 1 이다. 이 통계에서는 일본의 대한수출 전체에 차지하는 부품·소재의 비율은 50%대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적자의 원인이 부품·소재에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1 한국의 대일수출입에 차지하는 부품·소재의 비율(단위:억엔)

	수입	부품·소재	%	수출	부품·소재	%
2007년	63,840	36,878	57.8%	32,095	19,876	61.9%
2008년	61,699	34,940	56.6%	30,484	17,701	58.1%
2009년 1-10	39,922	21,598	54.1%	18,589	9,093	48.9%

(출처)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원자료는 일본의 통관통계)에서 필자가 작성

(2) 한국의 대일수입 품목

일한의 수출입 거래 전체의 동향과,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주요 품목을 밝히기 위해 우선 한국측의 수출입 실적을 분석했다.

표 2 한국의 대일수입 실적(단위:100만불)

상품명	2007	비율	2008	비율	2009/1-11	비율
기계류	14987.0	26.6%	15896.0	26.1%	10309.0	23.3%
전자전기 제품	14337.0	25.5%	14184.0	23.3%	9749.0	22.0%
화학공업 제품	10540.0	18.7%	11577.0	19.0%	9695.0	21.9%
철강금속 제품	11310.0	20.1%	13409.0	22.0%	9356.0	21.1%
기타	147424.0	9.1%	5891.0	9.6%	5161.0	11.7%
총계	56250.0	100%	60957.0	100%	44270.0	100%

수입 총액에 차지하는 기계류+전자전기 제품+화학공업품+철강금속 제품의 비율:

2007년 90.6%, 2008년 90.4%, 2009년 1-11월 88.3%

(출처)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원자료는 일본의 통관통계)에서 필자가 작성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품 중 기계류, 전자전기 제품, 화학공업 제품, 철강금속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4개 분야의 상품의 합계는 07년이 90.6%, 08년이 90.4%, 09년 1~11월이 88.3%로,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일본의 대한수출 품목

일본측의 수출입 통관통계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9년의 주요 대한수출 품목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이 중 주요 수출상품인 화학품, 기계기기, 금속품만으로 2007년에는 전체의 80.6%, 2008년은 81.2%, 2009년 1-11월은 81.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기계기기에는 기계 본체와 기계 부품이 포함되어 있지만, 부품·소재가 수출 상품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표 3 일본의 대한수출 통관실적

(금액: 억불)

상품	2007년	구성비%	2008년	구성비%	2009/1-11	구성비%
식품·동식물 생산품	4.5	0.8	4.3	0.7	3.7	0.9
원료품	22.4	4.1	22.8	3.9	16.0	3.8
광물성 연료	11.3	2.1	16.0	2.7	10.6	2.5
공업제품	476.2	87.8	521.2	88.4	377.3	88.7
화학품	108.9	20.1	117.5	19.9	100.5	23.6
기계기기	240.4	44.4	250.1	42.4	168.2	39.5
금속품	87.0	16.1	111.5	18.9	76.4	18.0
기타 공업제품	39.9	7.2	42.1	7.2	32.2	7.6
기타	27.6	5.2	25.5	4.3	17.6	4.1
수출 합계	542.0	100	589.8	100	425.2	100

수출 총액에 차지하는 화학품+기계기기+금속품의 비율:

2007년 80.6%, 2008년 81.2%, 2009년 1-11월 81.1%

(출처) JETRO 홈페이지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출처:재무성)」

이상과 같이, 한국의 통계를 보더라도, 일본의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은 화학공업 제품, 철강·금속 제품, 전자·전기 제품을 포함하는 기계기기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히 「부품·소재」라고 하는 분류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대일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여 현지생산을 할 필요가 있다.」

대일역조의 주요 원인이 되어 있는 상품은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주요 수출 상품인 화학품, 기계기기, 금속품이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철강관, 반도체, 합금철 선철 및 고철, 플라스틱 제품, 선박, 광학기, 유리 제품, 철강 반제품, 기타 화학공업 제품 등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측이 주장하는 단순한 부품·소재의 거래가 아니라 기계류 본체에 부수된 부품과, 소재 중에서도 화학제품이나 철강제품과 같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소재들이 중심이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보고 일본에서 이들 상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은 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기업들이며, 일본의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부품·소재」라고 한마디로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일의 회의 등에서 한국측이 「부품·소재 산업」이라고 할 때 중소기업과 결부시켜서 발언을 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재를 제조하고 있거나 소재를 가공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상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아닐까 상상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 「소재산업」이라고 할 때는 『(가공 조립 산업에 대하여) 타산업에 재료를 공급하는 산업. 철강·비철금속·화학·섬유·석유 등 산업』(대사림)을 말한다. 따라서, 주로 대기업을 상기시킨다. 또한, 「부품산업」이라고 할 때는 작은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과, 전자부품 등을 양산하는 대기업 등 양쪽을 이미지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중소기업만을 의미하는 경우는 적을 것이다.

이렇게, 대일역조의 원인이 되어 있는 상품 분야는 일부 중견·중소기업이 생산하고 한국에 직접 수출하는 제품도 있겠지만, 일본의 중견·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일본 대기업에 납품하고, 그것을 대기업이 기계장치 등과 조합해서 한국에 수출하거나, 일본 대기업이 직접 부품·소재와 기계 본체를 제조하고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수출의 주체는 대기업이며 「대일역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품·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전제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 되고 만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의 무역통계에는 일본에서의 수입 실적이 많은 한국기업의 이름이 공표되어 있었다. 2007 년의 연간 상위 20 개사는 표 4 와 같은 기업들이다. 이 중에는 전자,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화학업계 등 한국의 대기업과, 일본 및 미국의 반도체와 박형 TV 용 부품 업체 등이 나열되고 있으며, 한국에 있어서 대일수입의 주체가 대기업임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다만, 이 정보는 2007 년의 랭킹을 마지막으로 협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되고 지금은 볼 수 없다.

표 4 2007 년에 일본에서의 수입 실적이 많았던 한국기업의 랭킹

1. 삼성전자(주)	11. LG 디스플레이(주)
2. AMKOR Technology Korea(주) (주 1)	12. 동국제강(주)
3. 하이닉스 반도체(주)	13. 삼성중공업(주)
4. 현대 하이스코(주)	14. S-LCD(주) (주 2)
5. 현대중공업(주)	15. 도시바 일렉트로닉스·코리아(주)
6. (주)LG 화학	16. 현대자동차(주)
7. 현대제철(주)	17. 롯데 상사(주)
8. (주)POSCO	18. 한국 닛토 옵티컬(주) (주 3)
9. LG 전자(주)	19. 동부제철(주)
10. GM 대우 오토 & 테크놀로지	20. 일본전기 유리 한국(주)

(주)

1. 미국 AMKOR Technology 株式会社. 반도체 제조
2. 소니와 삼성전자의 합작회사, 액정 패널 제조
3. 니토전공(주) 株式会社. TFT-LCD 용 편광필름 제조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한국무역통계에서 발췌.(2008년 8월 현재)

이렇게, 일본에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은 대기업이 중심이며, 한국에 있어서도 대규모 수입자는 대기업임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중소기업이 대일역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일역조 해소를 위해 일본의 중소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여 현지생산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4. 「일본기업을 위해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등 대한 투자 조건을 개선하겠으니 일본기업이 한국에 투자해 주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일시에도 『신정부도 한국에서 일본기업 전용 공단을 조성하여 기업이 필요한 곳에 공장부지를 염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2008년 4월 21일 「연합뉴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인건비 양등이나 노동력 부족 등 이유로 지금은 한국기업이 공장을 잇따라 중국 등 해외에 이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제외하면 일본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필연성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대일수입이 많았던 LCD 업계 등에서는 이미 일본의 대기업이 한국업체에 디지털 소재 등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에 공장을 건설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일본의 대기업이 신규로 진출할 여지는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한국에 부품 등을 수출하고 있는 복수의 일본 중소기업이 한국의 공단에 진출하여 현지생산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대기업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대형 기계설비 등과 비교해서 그 금액은 미미한 것밖에 안되므로 대일역조 해소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대한투자나 한일 중소기업의 협력 확대 등은 대일 무역역조 문제와는 분리시켜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3절 대일역조 문제의 원인과 대응

1. 원인의 소재

한국측의 주장으로서 상기한 각각의 항목에 관하여 검토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측은 대일역조의 최대 원인이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화학품, 기계기기, 금속품 등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속품 등은 소재 산업에 들어가지만 금액으로는 기계 본체 등 기계류가 중심이며 부품·소재가 중심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또한,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대기업이 생산·제조한 것이 중심이며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직접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본의 중소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여 현지생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일역조의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정부가 일본기업 용으로 부품·소재 전용공단 등을 조성하는 등 대한투자 조건을 개선했다 하더라도 한국은 이미 일본기업으로 하여금 투자 환경이 유리한 곳이 아니므로 투자 확대에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2. 최근의 논의

대일역조의 근본적 원인은 한국이 고도성장 시기에 일본에서 제조설비, 부품, 기술 등을 도입할 것을 선택했다는 점에 있다.

2008년 5월에 일본에서 개최된 제 40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무역불균형문제에 관하여 한국측으로부터 『일본에서의 기계, 부품, 소재 등의 수입은, 한국기업이 국산화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 투입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이미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동종

산업의 성과를 한국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자본재, 중간재의 수입은 차선지책이었다고 하되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해 온 요인의 하나다.』고 하는 발언이 있었다.

또한, 「일한의 균형 있는 무역확대를 향해」란 주제의 세션에서 일본측으로부터 「한국으로 하여금 부품·소재의 불균형은 정말로 문제가 될 것인지?」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측에서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아니어도 역조규모와 구조적 문제로 인해 FTA 협상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다른 한국측 발언자는 「부품과 소재는 달리 논의해야 하며, 부품은 한일 간에서 분업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소재는 일본으로부터 기술협력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 대일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으로부터의 대한투자를 확대해야 하다고 하는 한국측 주장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3. 대일역조의 근본적 문제

과거 한일 간의 민간회의 등과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게다가 한국에서의 현지조사의 결과를 보는 한, 대일적자의 근본적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며 진정한 원인을 추구한 한국측의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다.

한국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일본에서 부품, 설비 기계 등을 수입함으로써 인해 생긴 대일 무역역조는, 고도성장을 위해 한국이 스스로 선택한 수단을 통해 생긴 것이라는 인식이 한국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한 협력을 일본측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 오랜 세월이 걸쳐서 대폭적인 무역적자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원래 대일역조는 해소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대일역조의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 계속 거론되어 온 방법으로 정말로 적자가 해소될 것인지, 수십년이나 같은 내용을 되풀이 논의해 왔는데 사태가 호전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는 한 미래를 향한 적극적 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2009 년의 한국의 국가별 무역수지 통계 중 한국이 적자를 내고 있는 국가를 적자금액이 큰 순서로 상위 10 개국을 일람표로 만든 것이 이하의 표5다.

한국은 대세계 무역수지는 흑자이지만 일본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각국에 대해서는 적자를 내고 있다. 이 중, 공업국인 일본과 독일을 제외하면 모두 자원국이며 중동의 산유국과 동남아시아의 LNG 수출국, 호주에서의 철광석과 석탄 등 광물자원의 수입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원국에서의 원유, LNG, 광물자원의 수입과 일본, 독일에서의 기계, 부품 등 공업제품의 수입은,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상품이며, 주요 수입자는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산업이다. 따라서, 한국과의 양자간 무역으로 한국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의 경제구조상의 특징으로 이해해야 한다.

표 5 한국의 무역적자 상대국 순위(2009년 통관실적)				
국가명		수출액	수입액	무역적자액
1	일본	21,771	49,428	-27,657
2	사우디아라비아	3,857	19,737	-15,880
3	호주	5,243	14,756	-9,513
4	쿠웨이트	744	7,992	-7,248
5	카타르	1,310	8,386	-7,076
6	아랍 에미리트 연방	4,978	9,310	-4,332
7	오만	531	4,124	-3,593
8	독일	8,821	12,298	-3,477
9	인도네시아	6,000	9,264	-3,264
10	말레이시아	4,325	7,574	-3,249
전세계 합계		363,534	323,085	40,449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단위:100 만불)

4. 한국측의 대응책

대일역조 해결을 위해, 일본에서의 수입을 줄일 수 없다면 한국의 대일수출을 늘리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나, 대일수출은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일수출이 부진한 현상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시종일관 「대일수출이 늘지 않는 것은 일본의 비관세장벽(비관세 조치) 때문이다」고 주장해 왔다. 물론, 한국기업 중에도 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일본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있지만, 대일수출이 확대되지 않는 최대 원인은 일본의 비관세 조치 뿐만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시장개척 노력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국측은 대일역조 해소를 위해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에 노력과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하여 자기 나라 기업에 대한 지시, 요구, 요망 등의 수위가 낮고, 자조노력보다 일본에 대한 요구가 너무 강한 것 같이 생각된다. 한국정부는 대일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한국기업을 지원하거나, 대일수출에 성공한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등 자국의 기업에 대일역조 해소 노력을 강하게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국기업 중에는, 전자, 가전, 자동차 등 개별 분야에서 한국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 업체로 성장한 기업들이 여러개 있지만, 이들 기업의 대일수출 실적이 거의 없거나, 진출해도 충분한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서 일본시장을 포기해버린 이유를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한국의 대기업이 일본 시장을 개척 못하고 있거나 혹은 굳이 개척하려 하지 않는다면, 대일역조 해소의 하나의 방법인 대일수출 확대는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과거에 여러번 대일역조 해소방안을 내세우면서 결과적으로 충분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대책이 어느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금후의 경위를 주목하고 싶다.

결언

고도성장 시기에 한국은, 일본에서 기계, 부품, 기술 등을 도입하여 한국에서 조립한 제품을 수출하는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했다. 그 이후, 인재개발,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기계, 부품 등의 국산화를 추진해 왔지만, 아직 충분히 국산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구미와 일본의 특정 업체만이 생산하고 있는 기계설비, 부품 등의 공급원을 계속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수입 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주요 상품 중에는, 디지털 소재나 부품, 반도체 제조설비 등 한국에서 제조하기 어려운 제품을 비롯, 화학제품이나 철강제품 등 제조 사양의 차이나 수급 밸런스에 따라 수출도 수입도 하는 상품, 혹은 수요량이 적어서 한국에서 국산화하기 보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유리한 상품, 반도체와 같이 일본과 사이에서 수평분업을 하고 있는 상품 등,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다.

이러한 상품 중에는 한국의 기술력이나 공급능력 향상에 따라 앞으로 국산화가 기대되는 상품들도 많지만, 한국의 경제구조를 대폭 전환시켜서 대일 무역역조를 단기간에 해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한국측이 주장하는 대일역조 논의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거의 논의를 답습하는 한 대일역조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한일의 경제관계 개선에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원인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대응방안을 검토하지 않으면 유효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본이 대일역조 개선을 위해 협력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으며, 그렇게 되면 한국측의 실망이 커지고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라도 우선 대일역조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올바른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일역조는 한국경제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오랜 세월을 들여서 한국정부와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큰 과제이다. 장래적으로 한일 무역을 확대 균형시키겠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며,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논의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¹ 「달러」는 미국 달러, 이하 동일함.

²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전신은 상공부. 일본의 구(舊) 통상산업성과 유사한 조직이었지만 통상교섭업무가 제외되고 산업자원부가 지식경제부로 개칭되면서 국가연구·개발정책과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